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장기화로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립과 대결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통일의 길은 더더욱 아득해 보인다. 한반도의 분단은 70년을 넘어왔다. 세계전쟁의 피해 국가이면서 동족상잔을 겪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면서 지상 과제이다. 그런데 지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20대 국회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국정의 동반자이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20대 국회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없다

안정, 통일과 무관한 국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비례대표에 어느 당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를 배정하지 않았다. 더러 있더라도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후순위에 배치되었다. 지역구 당선자들 중에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공천의 불균형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회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정부가 독점하는 편파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중요한 대외 정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외교 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 적합한 인물만이 예상된다. 국민의 대변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입안은 쉽지 않다.

대북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선행할 수 있는 척도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와 직결된 대북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벽돌을 쌓듯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니 실

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성숙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그 노선에 맞지 않는 전문가는 모두 단절되고 폐기되니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기 어렵다.

오랜 과정을 거쳐 키워 놓은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들을 재단해 폐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변경·단절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좋은 역사는 계승하고, 미흡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 발전의 교훈이다. 20대 국회의 출발에서부터 역사의 교훈을 소중히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는 현직을 존중하고 현직은 전문가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며 맥락을 이어갈 줄 알아야 한다. 정책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 했던 것을 이어받아 문제점은 시정·진전시키고 다음 사람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역사상

과 일관성을 가져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를 내는 정책을 함부로 폐기·변경하지는 못할 것이다.

분단국가인 서독은 20년 동안 대화와 교류라는 일관된 대동독 정책으로 통일을 일구 냈다. 70년대 초 진보 성향의 시민당은 서독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협력 정책을 펼쳤다. 80년대 보수 성향의 기민당은 경제 발전을 한 걸음 더 도약시키기 위해 화해·협력 정책을 유지했다. 통독 2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통일의 역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90년대 말 진보성향의 김대중정부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말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는 자원의교를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대북 강경책을 펼쳤다. 한국과 서독의 정책 출발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책의 단절이 상이한 결과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치는 정책이나 사람을 존중하고 잘 활용할 줄 모르는 독선에 빠져 있다. 독선과 편 가르기에 빠져 소통을 하지 못 하고 아집에만 골몰하면 스스로 패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종교칼럼

사랑의 기쁨



조발근씨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한국은 2.3명을 기록, 전체 34개 회원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회원국 중에선 1위에 해당한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계로 먼 서울시민 가족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신혼이혼은 전체 이혼 비율 중 3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황혼이혼은 8%에 그쳤다. 하지만 2013년 신혼이혼은 21%를 기록하며 다소 하락한 반면 황혼이혼은 4배가 증가한 31%였다. 20년 만에 이혼의 연령별 비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또한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기준자 6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로 경제적 이유(2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의 외도(24%), 성격차이(22%), 학대·폭력(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과 비교해 보면 다소 변화한 것으로 드러난다. 2009년에 나타난 이혼사유 순위는 성격차이(28%)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배우자의 외도(25%), 경제 문제(22%), 학대·폭력(7%) 등이 뒤따랐다.

그렇고, '어쩌다 보니' 한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

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다. 이미 교종 프란치스코는 이혼한 사람, 이혼 후 재혼 사람들에게 관해 “나는 비정상적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가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2015년 6월 24일 미사강론) 라고 말하며 이혼 혹은 재혼 가정을 걱정한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가정에 관해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를 발표했다.

결혼이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즉 사회문제로 변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상의 문제라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라면 그것은 사회의 문제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혼한다 보면 사회는 물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종의 이번 권고는 교종이 이전에 반포한 글과 이어져 있는 것 같다. '복음의 기쁨'에서부터 교종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교종의 권고는 “가정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사회의 기쁨입니다”로 시작한다. 가정에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혼 이전에 결혼이 쉬운 세상인가? 2015년 혼인건수는 30만 5500건으로 2014년 보다 5.4%인 1만 7300건 감소했다. 2004년(30만8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국제적인 혼인을 비교수치인 조혼인율은 6건으로 전년보다 0.4건 줄었다. 이는 1970년 조혼인율 통계를 산출한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교종의 가정에 대한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가장 필요한 지적이다.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 문제이다. 결혼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회에서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교회의원 공약 중에 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공약은 없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결혼과 이혼이 사회의 문제라는 것과 연관되어 살펴봐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교종의 이 말을 새겨본다. “오늘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혼인을 강화하고 그래서 깨어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사목적 노력입니다.”(사랑의 기쁨 307항)

기고

사물인터넷의 미래 두 얼굴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똑똑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세상에 많이 있는 프로그램할 수 없는 물건. 예를 들어 중앙처리장치를 갖지 않은 저가 가전제품 등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모든 물건이 작은 컴퓨터를 탑재해서 똑똑해지는 것인데 작동 프로토콜을 통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최근 구글(Google)이 내세우고 있는 사물인터넷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후자는 중앙처리장치 없는 저가 가전제품을 범용한 물건인 채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세계이다.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선태그 등을 물건에 붙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센서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기계와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와 후자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는 가격과 소비전력일 것이다. 전자는 인터넷에 연결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에 비해 초소형컴퓨터가

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전자는 1년 정도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초소형컴퓨터 보드가 필요한데 아직 이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NFC)기능을 응용하면 NFC태그가 부착된 물건의 위치나 상태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NFC태그는 1000원 이하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스마트폰 앱과 결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전력블루투스통신(BLE)기술을 응용하면 물건의 위치정보 활용이나 가정에서 가전기기들의 정보화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사물인터넷의 미래 모습의 하나는 똑똑한 장치들로 세계를 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렴한 가격대의 가전기기를 NFC, NFC태그, BLE 등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미래 모습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

니라 공존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면 작은 소비전력을 사용하는 초소형컴퓨터 보드가 등장하게 되면 똑똑한 장치들로 세계를 채우는 미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과 소비전력이 지금보다 10분지 1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똑똑한 장치가 확산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관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총선·교체·연료보급 없이 장기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전원으로서는 환경발전(에너지 하베스트)에 대한 연구개발(R&D)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환경발전(Energy Harvest) 기술은 태양광, 조명빛, 기계가 만드는 진동, 열 등의 에너지를 채취하여 전력을 얻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과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립전원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社說

전남 한우 홍콩 수출...농수산물로 확대를

지난해 말부터 홍콩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전남산 한우가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우 1마리 가격은 웬만한 경차 1대 가격보다 훨씬 높고 알려져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한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57마리가 도축·가공돼 홍콩으로 팔려 나갔다. 홍콩은 1년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검역·위생 기준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간헐적으로 재발하고 있지만 전남만큼은 청정 지역을 유지해 이처럼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홍콩에서 거래되는 전남 한우는 말 그대로 '귀한 품'이다. 수출업체가 사들이는 도축 가공 한우고기(정육)는 kg당 8만 원 선인데, 현지 소비자 가격은 32만 원으로 4배에 이른다. 살아 있는 암소 600kg 1마리에서 400kg가량의

고기가 나온다고 보았을 때 이를 홍콩 판매가로 환산(400kg×32만 원)하면 1280만 원에 팔리는 셈이다. 천해의 환경에서 엄선한 사료로 사육해 수출하는 최고급 한우 1마리가 1000만 원대의 국내 경차 가격을 웃도는 것이다.

물론 축산 농가에 이익금이 모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높은 판매가에는 수출업체 통관 수수료, 바이어 유통 마진이 포함되고 현지 물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 한우가 글로벌 중심인 홍콩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뒤이어 마카오도 한국산 쇠고기 수입을 승인했다니 전남 한우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남 쌀 역시 이미 중국의 까다로운 관문을 뚫은 바 있다. 이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홍콩의 한우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전남 농수산물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서부농산물시장 ‘쪽파 수난’ 지켜만 볼 건가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쪽파 출하 농민들이 10년 동안 무려 10차 레나 이곳저곳으로 경매장을 옮겨 다니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쪽파 재배 농민들이 매장을 전전하게 된 것은 사실상 도매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도매시장 입주 법인과 관련 중도매인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개설한 도매시장 내 청과물동과 채소동에는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광주공판장을 비롯한 두레청과㈜, ㈜호남청과 등 3개 법인이 입주해 청과와 채소를 도·소매하고 있다. 애초 쪽파 농민들은 채소동에서 물건을 거래했으나, “산지에서 수확한 채 거래되는 쪽파에 묻어 있는 황도로 인한 흠집이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일부 법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3개 법인과 농협광주공판장 소속 채소 중도매인의 반대가 이어지면 서 지난 2013년에는 10개월 동안 6차례 나 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현재 쪽파 출

하 농민들은 채소동과 수산물동 사이에 어렵게 자리를 잡고 비 가림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농협광주공판장 측이 예전과 비슷한 사유를 들어 쪽파 경매장을 옮겨 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 쪽파 출하 농민들의 수난은 계속될 조짐이다. 쪽파 농민들은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농산물 도매시장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광주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무대응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영 시장의 존립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시설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로, 농민들의 공정한 판매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특정 법인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쪽파 출하 농민들의 눈물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유산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전래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외부에서 건너온 것이 분명할 경우엔 아쩔 수 없이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온갖 이유를 대서 그 사실을 희석시키곤 한다.

그런 일본도 자신들의 국보 1호가 한국에서 전래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경’에 부딪친 적이 있다. 일본의 국보 1호는 아스카시대에 만들어져 교토의 교류사에 보관된

다행히 국보수리소에서 손가락을 수리해 불이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불상의 재질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적송(赤松)임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적송이 아닌 녹나무를 조각으로 사용했었다. 결국 일본인들도 이 불상을 일본 고유의 작품으로만 주장할 수는 없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또 엉뚱한 주장을 내놓는다. 백반 양보해 한반도에서 일본

반가사유상

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풍토에 맞춰 조성된 것인 만큼 ‘일본 고유의 불상’이라는 것이다. 조형 감각이 다르다는 얘긴데, 우리의 국보 83호와 비교해 보면 재질만 다를 뿐 조형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보면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에선 일본 국보인 주구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일본인들은 이 평가를 두고두고 자랑하며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60년 큰 사건이 벌어진다. 한 학생이 목재로 만들어진 이 불상의 오른손 악자를 부러뜨린 것이다. 당시 해외포퓰리즘에도 등장했던 이 사건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풍토에 맞춰 조성된 것인 만큼 ‘일본 고유의 불상’이라는 것이다. 조형 감각이 다르다는 얘긴데, 우리의 국보 83호와 비교해 보면 재질만 다를 뿐 조형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보면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에선 일본 국보인 주구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일본인들은 이 평가를 두고두고 자랑하며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60년 큰 사건이 벌어진다. 한 학생이 목재로 만들어진 이 불상의 오른손 악자를 부러뜨린 것이다. 당시 해외포퓰리즘에도 등장했던 이 사건은,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인사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